두산에너빌리티, 전남에 풍력발전기 부품공장 설립

전남도와 해상풍력산업 육성 업무협약
2032년까지 대조립·부품공장 등 검토
도, 입지·인허가·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송용진 사장과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가 국내 최대 해상풍력 허가 용량을 바탕으로 발전단지 조성에 이어 제조 기반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발전과 설비 생산을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며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축을 전남에 세우겠다는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김원이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해상풍력 전주기 산업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터빈 공급 협력을 넘어선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전남지역 해상풍력 발전기 공급 물량과 연계해 2032년까지 풍력발전기 대조립을 포함한 부품 생산공장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입지 선정과 인허가, 기반시설 확충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선다. 발전단지 조성과 제조시설 유치를 병행함으로써 생산·고용·연관 산업을 지역 안에 묶어두겠다는 구상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년 국내 최초 해상풍력 상업단지인 탐라해상풍력(30MW)을 준공하며 시장을 개척했다. 이후 독자 개발한 10MW급 해상풍력 터빈의 국제 형식인증을 취득했고, 영광 야월해상풍력에 8MW 터빈을 공급하는 등 상업 실적을 축적해왔다. 대형화·고출력화 흐름 속에서 국내 기술 자립 기반을 확보한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전남은 현재 22.2GW에 달하는 전국 최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해상풍력 1단지(96MW)가 상업운전에 돌입했고, 영광 낙월해상풍력(365MW), 신안 우이 해상풍력(390MW) 등 대형 프로젝트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발전 물량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제조와 유지·보수 수요까지 지역에서 흡수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제로 제시돼 왔다.

입지 기반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안(3.7GW)과 진도(3.6GW)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됐으며, 여수·고흥에서는 공공 주도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을 중심으로 설치·물류·유지관리 기능을 결합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병행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설계·제작·설치·운영을 아우르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발전단지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핵심 설비 생산과 부품 조립까지 지역에 안착시켜, 해상풍력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단순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넘어 설계·제작·설치·운영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지난해 LS머트리얼즈와 LS마린솔루션의 해남 화원산단 해상풍력 전용 설치항만 구축 투자에 이어 국내 대표 터빈 제조사인 두산에너빌리티와 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전남이 해상풍력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정을호

청와대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초선 정을호 의원이 내정됐다.

3일 정가에 따르면 전북 고창 출신인 정 의원은 이날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고 오는 4일부터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민주당 당직자로 일하며 당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청 간 가교 역할을 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지난달 18일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이 임명된 데 이어 정 비서관의 인선까지 이뤄지면서 청와대 '2기 정무라인' 진용도 완성됐다.

한편 정 비서관이 청와대로 입성함에 따라 의원직은 다음 비례 순번인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이어받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민형배 "삼성·SK 유치에 시민 공유자본 펀드 도입"

'투자자 전남광주' 모델 도입 공식 제안…생애 소득 환원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사진) 이 글로벌 기업 유치 위한 '투자자 전남광주' 모델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민 의원은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초첨단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시와 시민이 직접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지 제공과 세제 감면 중심의 옛날식 기업 유치는 하지 않겠다"며 "통합특별시가 자체 재원으로 부지와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업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용을 지분과 교환하는 '스왑 방식'을 활용해 시 정부와 시민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기업과 위험을 분담하면서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산업화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모델은 통합특별시 재정과 공공금융을 종잣돈으로 삼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공유자본'을 결합해 공동 투자에 나서는 방식이다.

민 의원은 "기업은 안정된 투자 환경과 전력·입지·인력 기반 위에서 투자 규모를 2~3배까지 확대할 수 있고, 통합특별시는 정당한 지분과 배당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보한 지분 수익을 '시민 생애소득' 체계로 설계하겠다고도 밝혔다.

청년에게는 학자금과 주거 자본으로, 중장년에게는 재교육과 전직 지원 자금으로, 노년에게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 데이터센터, 발전소, 반도체 팹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전반에 이 같은 투자 모델을 적용해 지역 공동체가 배당소득과 자산소득을 공유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구상도 내놨다.

민 의원은 "보조금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닌 자본을 운용하는 도시, 삼성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이 시민과 함께 투자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개정을"

재정 지원 방안 명시 등 주장
통합특별시장 단일 후보 추진

진보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통합특별법의 한계를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보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은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지만 한계에 심각한 우려와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당은 "제정된 특별법은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에 대한 정부의 철학이 부족하다"며 "특별법 개정과 특별시의 변영을 위해서 진보와 민주의 양 날개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특별시장이 막강하나 인사·재정권을 행사하는 구조에 비해 시민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며 "진정한 분권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행정의 권력을 주민 주권으로 옮기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4년간 이뤄질 20조원 재정 지원의 조달·집행 방안을 특별법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당은 군 공항 이전,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한 국가 지원 명문화와 광주 광역의원 정수 확대도 제안했다.

진보당은 광주·전남 시·도당은 "민주의 힘에 진보의 방향을 더하고 서로를 견제, 감시하기보다 협력, 균형으로 서로를 완성하는 정치가 진보당의 호남 양 날개 정치"라며 "이를 통해 전남·광주 통합을 완성하고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당은 이종욱 광주시장 후보와 김선동 전남지사 후보가 조만간 단일화해 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나설 예정이며, 통합의회 교섭단체 의석 확보 등을 목표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6·3 지방선거 브리핑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
'무안반도 통합 특례시' 제안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사진)가 목포·무안·신안을 하나의 도시로 통합하는 '무안반도 통합 특례시'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강성휘 예비후보는 3일 "분산된 행정체계로는 인구 감소, 산업 침체, 재정 취약이라는 서남권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미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의 전재 조건으로 '특례시 지정'을 제시했다. 단순 행정 통합이 아닌 권한과 재정 특례가 보장되는 특례시로 지정돼야 AI·에너지 등 국가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현행 특례시 지정 요건이 인구 기준 중심으로 설계돼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 요건 개정과 '3개 이상 시·군 통합'과 같은 구조개편형 통합에 대한 특례시 지정 근거마련, 통합 지역에 대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및 재정 특례 부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방선거 직후 목포·신안을 우선 통합하고 이후 무안을 포함한 3자 통합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도 제시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이재태 도의원, 나주시장 출마 선언
'3대 시민 특권·5대 약속' 제시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나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선언을 통해 "무너진 나주의 자부심을 바로 세우고 시민이 도시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시민주의 행정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나주가 재정 기반 약화와 인구 감소, 원도심 공동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도시 운영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청년 유출과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며 균형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핵심 공약으로 에너지 연금,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나주 인생 책임제 등 '3대 시민 특권'을, 도시 재설계를 위한 5대 약속으로 에너지 산업 기반 경제 구조를 구축해 지역 재정을 확충하고, 시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경제 모델을 만들겠다는 대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전남도의회 대변인,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 경선대책위원회 조직특보 등을 지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황경아 남구의원, 남구청장 출마
"혁신 행정…대전환 이룰 터"

황경아 광주 남구의회 의원(사진)이 6·3 지방선거 남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의원은 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체 상태인 광주 남구의 현상유지형 관리 행정을 끝내고 대전환 시대에 맞게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혁신 행정을 펼치는데 앞장서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바꾸자 남구, 일할 사람 황경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혁신 행정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남구의 대전환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산업·일자리 혁신 △골목경제 회복 △남구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문화·관광·생활 인프라 확충 △실행중심의 책임행정 등을 제시했다.

또 황 의원은 "남구는 고령화 가속화, 청년층 유출 심화, 산단 활성화 지연, 골목상권 침체, 돌봄 수요 급증, 원도심 노후화 등 복합적 구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모두가 구청장이 직접 방향을 잡고 조정해야 할 문제들로, 당선 즉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황경아 의원은 "아이들이 웃고, 청년이 돌아오고, 어르신이 존중받고, 주민 모두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남구를 만들겠다"며 "남구를 새롭게 바꿀 사람, 일할 사람 황경아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나광국 도의원, 무안군수 출마 선언
"무안의 기회 놓치지 않겠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사진)이 3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의원은 선언에 앞서 최근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이 아픔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원인 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출마 선언의 방점은 '통합 이후 무안의 좌표'에 찍혔다. 그는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무안이 기회를 설계할지, 주변에 머물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며 "무안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오랜 갈등의 상처가 있었지만 새로운 합의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이제는 과거의 찬반을 넘어 전략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보상·지원의 구체적 이행 담보 △공항 이전 이후 산업·교통·미래 전략 수립 △통합 이후 무안의 실질적 이익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행정 방식의 전환도 공약했다.

그는 "밀실이 아닌 공개,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 공론화,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 협상으로 군정을 바꾸겠다"며 간부회의를 포함한 회의 공개 전환과 관사·출퇴근 차량 미사용을 약속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